

건설산업의 쿼텀점프를 위한 21대 국회의 중요성

(규제의 양산보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문화로의 전환)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
(yjjun@cerik.re.kr)

2

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국회

1. 국회의 본질과 중요성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입법, 재정, 국가기관 구성, 국정 감시 및 통제 등의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자. 중요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각 정당이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해 법률을 제·개정하는 절차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수정 없이 가결되는 사례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예산안도 국회 심사 단계에서 감액과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실시될 때에는 언론의 관심이 국회로 집중되고, 인사청문회를 전후해서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낙마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전해진다(임재주 외, 2019). 이처럼 국회는 정책 입안과 추진에 있어 국정의 중심축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국회, 건설산업 발전의 네이게이터

개별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국회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예전과 달리 정책

입안 및 추진의 주체가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입법 및 재정, 국정 감시 기능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거나 대폭적인 조정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당정 협의회의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정·청(政靑) 고위 정책협의체가 부활하는 상황에서도 그 위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제법안의 법안 발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예산확충과 관련 규제 완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특정 산업의 경우 급격히 시장과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사례(예: 바이오산업 등)에서도 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회의 중요성을 유추 가능하다.

반면 산업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의 경우 관련 법 제·개정이 장기간 표류되거나, 예산 지원이 부족하여 산업의 경쟁력이 감소하는 사례 또한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건설산업 또한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예전 대비 최근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행정부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거시적 경제정책(예: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등)을 수립하더라도 입법부의 적극적 규제 완화 및 예산 지원 등이 결여되어 그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헌법(제123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정책 마련과 관련해서도 최근 중소건설기업과 관련된 정책발굴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즉, 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산업에 대한 국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단지 집값 안정 및 산업 내 부조리 퇴치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산업이 아니라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핵심산업이며,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교통, 생활형 SOC, 주택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서민의 일자리와 살림살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진정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국회는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 항해사(navigator)이자 핵심 구성원인 점을 인식하여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입법부의 모든 활동에 있어 입법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¹⁾

1) 이 외에도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안정적 시장 마련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전략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타 원고에서 명시할 예정이기에 본 고에서는 제외함.

규제의 대상 : 건설산업

1.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

하지만 최근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건설산업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의석수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여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공약집을 살펴봐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선정한 10대 정책과제 중 건설 관련 공약은 타 산업 대비 큰 규모와 종사자 수가 많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이다. 직접적인 산업지원 정책은 기술형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20% 이상) 공약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과 관련된 광의의 정책공약을 살펴 보더라도 균형발전 항목으로 생활형SOC 확대만을 내세웠을 뿐, 지역기업 및 혁신·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건설업의 명시는 배제되어 있다.

반면, 공정 및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관련 규제의 강화가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성장 관련 입법대상에서는 배제된 채 말이다. 즉, 21대 국회에서도 건설산업에 대한 하도급, 안전, 고용 부문 등에 있어 규제의 강화가 계속될 것이다.

2. 대표적 규제산업, 규제의 요람, 건설산업

하지만 이미 우리 건설산업은 대표적 규제산업이다. 건설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부터 발주, 입·낙찰은 물론 시공 및 준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걸쳐 각종 법령 및 예규, 지침을 비롯해 발주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른 행정적·절차적 규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산업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촘촘한 규제가 불가피한 산업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과거 정부의 필요에 의해 탄생하고 정부 주도로 성장해 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에도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다소 전근대성을 지니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경제 발전이 지상과제였던 1950년대 말 「건설업법」이 제정되고 고도 성장기를 거쳐 오면서 규제 위주의 체질은 변치 않고 그간 계속된 규제 법령의 양산을 통해 더욱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한상준, 2016).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공정경제, 산업재해 발생 감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많아지면서 정책 효과 검증보다는 규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공공시장은 공공시장대로, 민간시장은 민간시장대로 규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산업 내 각종 규제 중에서는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무게를 둔 역주행 형태의 규제도 양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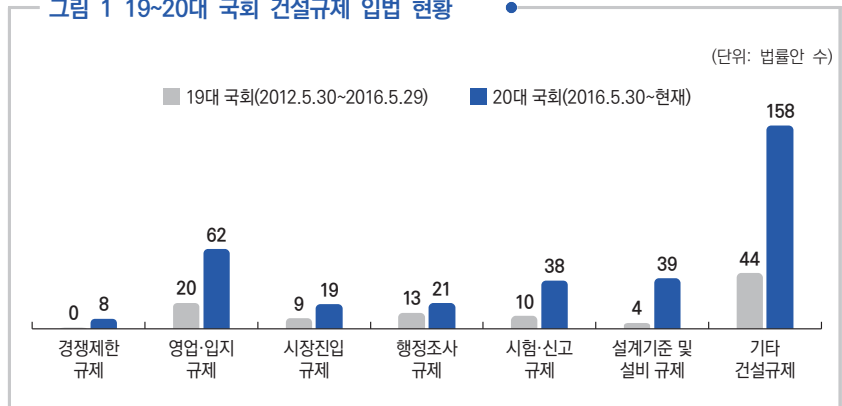
그렇다면 건설규제 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건설과 관련된 직·간접 규제 모두를 파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건설 분야의 대표적 규제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소관 규제만을 헤아려 보더라도 2019년 9월 기준 총 101개의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법률 중 직접적 건설규제 법률 수는 21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를 규제 조문 수(개별 규제 수)로 헤아려 보면, 총 1,810개 규제가 규율 중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건설규제는 그 분야가 경쟁제한 규제, 영업입지 규제, 시장진입 규제, 행정조사 규제, 시험·신고·허가·검사기관 규제, 설계기준·시설·설비 규제, 품질과 안전 등 기타 건설규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설상가상으로 직접적 규제뿐만 아니라 간접적 규제까지 고려한다면, 더욱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타 부처 소관 건설규제까지 확장할 경우 무수히 많은 법률에서 규제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3. 계속되는 규제 강화, 요원한 건설규제 개혁

그런데도 최근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19대 국회의 경우 건설규제가 발의된 것이 총 100건이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345건(2020년 5월 기준)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폭발적으로 건설규제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령을 통한 규제 신설 외에도 광역·기초지자체 및 공공 발주기관 또한 조례, 규칙, 지침, 공사계약 조건 제·개정 등을 통해 건설규제 강화를 가속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신설·강화되고 있는 건설규제 대다수가 불공정 행위 예방 및 안전강화, 고용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자의 책임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주요 건설규제 강화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설사업 참여자 중 계약상대자(기업)를 제한하는 규제 사항이다.

그림 1 19~20대 국회 건설규제 입법 현황



즉, 대부분의 규제 내용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무게를 둔 역주행 형태의 규제이기에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더 많은 법과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더 깊고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이라며 과도한 건설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4. 건설규제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한계

그렇다면, 그간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을까? 사실 건설규제 개혁방안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넘친다고 볼 수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2009)’,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전략(2006)’과 같이 선진화, 혁신 등을 주제로 한 많은 정책 제안서들도 건설규제 개혁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건설업 등록제도와 같은 진입 규제부터 시작하여 생산 방식에 대한 규제, 가격 규제, 품질 및 안전 규제, 고용 규제 전반에 걸쳐 많은 개혁방안이 제안되고 실행되었다. 국회 또한 규제개혁의 큰 틀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제·개정되었다.

현 정부와 여당 또한 건설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설규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역시 경주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기획재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 시범 시행에 따라 건설 계약·조달 관련 규제 51건을 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2019년 초 규제혁신심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함과 더불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26개

건설규제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향후 관련된 활동을 계속할 것을 천명하였다. 국회 역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입법적 노력 및 정책 조율 또한 계속해서 지원하였다.

하지만 일부 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국회에서는 여전히 건설규제 강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거나 입법발의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단편적 규제 개선에 그치고 있어 업계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즉, 손쉬운 규제 완화 외에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산업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거시적 규제 개선 논의와 실행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원인이 겹쳐 국회와 정부의 건설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5. 건설규제 개혁의 실패 원인

국회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규제 개혁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림 2>와 같이 5가지 원인과 6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건설규제 개혁의 5가지 실패 원인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	복수 부처 중복규제 등	정치적 리더십 부족	추상적 규제개혁안	일회성 규제개혁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으로 인해	여러 부처와 관계되어 있거나, 특정 부처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청와대 및 국회 등 정치적 리더십 지원이 부족한 경우	규제개혁안이 추상적 거대담론 수준으로 구체성이 없는 경우	지속성과 일관성 없는 일회성 규제 개혁 시 (담당자 전보 등)

첫째, 규제 신설과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생각으로, 규제의 목적을 잃은 ‘처벌을 위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근본적 대책을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절대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향 설정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면서 피규제자 일방의 피해 발생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 부처 소관법률 제·개

정을 통해 중복적으로 규제를 양산하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일례로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 중복규제 법안으로 「하도급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심사 절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 스스로 자체 심의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한계와 더불어 규제 입법 이전에 정책을 먼저 발표함에 따라 허술한 심사와 입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식적 규제심사 체계와 입법절차에서도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규제심사 내용 또는 의안검토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규제심사 보고서를 비공개하거나 피규제자의 직·간접 비용 발생이 수반되는 규제임에도 이를 미분석하는 등 규제심사 원안의 통과를 위해 규제심사 절차를 우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넷째, 전 산업의 규제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의 인력 부족 역시 규제관리의 한계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를 관장하는 소관 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규제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관리 한계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입법이 정부입법 대비 상대적으로 법률안 제출 전(前) 심의 과정이 부재하고 심사 절차가 간단해 정치적 목적 또는 의정활동 실적 홍보의 필요성에 따라 과잉 입법되는 성향이 강하다. 결국, 의원입법 및 청부입법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 법률 대부분이 나열식(positive)으로 열거되어 있기에 복잡다기한 건설 관련 법률의 특성이 더해져 촘촘한 규제망이 형성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운 악순환에 손쉽게 빠지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 창출 등 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규제의 양산 보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으로 전환

1.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건설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향 : 국회의 역할

결국 과잉 규제를 지양하고 건설산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 수준의 합리적이고 과감한 건설규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과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그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나 특히 행정부를 견제하고 규제를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건설규제 개선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꾀하여야 한다. 그간 건설혁신 정책이나 산업 활성화 입법 노력이 큰 효과를 발현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양적인 규제 완화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단순 규제 철폐·완화(deregulation) 중심에서 ‘더 나은 규제(the better regulation 또는 smart regulation)’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도입의 원인인 규제 목적에 대한 개방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낡은 규제와 갈라파고스 규제, 관리 편의주의 규제에 대한 개선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방향을 이동시키고, 기존의 열거식 규제 체계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시대착오적이거나 퇴행적, 포퓰리즘 성격의 규제 내용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특히나 개별 법령이 복잡다기하게 얽힌 건설산업의 경우 규제의 입법 과정에서 타 법령의 규제 내용을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해 중복규제와 과잉 규제 등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및 법안 심사 시 관련 전문가 참석을 정례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폭넓은 규제개혁 협력체계와 규제정비 로드맵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 과제의 계속된 도출과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규제 개선 중심에서 덩어리 규제 개선으로 정책 전환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두의 책임은 무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규제개혁 실행 주체의 명확한 지정 및 책임의식 부여를 통해 일관된 규제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나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부처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 위원회 설립 또는 당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속도감을 배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셋째, 규제 생성 단계에서부터 관리·폐기에 이르는 규제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규제관리·정비 절차의 고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국회의 경우 앞서 언급한 무분별한 의원입법 및 청부입법 방지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분석서 첨부 의무화 및 규제일몰제 도입,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정비 및 확충 등의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건설산업 내 만연한 중복규제 정비 및 무분별한 규제 강화(개별법에 의한 독립적 규제 강화)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의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관련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는 전면 재개정 검토 역시 이제는 국회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21대 국회에서 꼭 해결하였으면 하는 개별 규제

상기와 같이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건설규제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외에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간 건설업계에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 또한 충분히 인정되는 개별 규제 역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는 대표적 고비용·저효율 산업으로 평가받아 낮은 생산성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건설사업의 확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스마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달 방식뿐만 아니라 건설 프로세스 전체의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제로 인해 실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요원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 성격의 (가칭)「스마트 건설기술법」 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최근 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높은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비용 인정을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추가(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포함)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및 주요 공공 발주기관, 건설관련 협·단체가 합의하였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노력을 계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표적 불공정거래 관행이라 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개선 및 공사비 감액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 구제장치 마련 및 불공정한 계약조건 개선을 통한 공정계약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건설 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역할 모색하길

지금까지 제안한 국회의 건설규제 개혁방안은 이해관계 상충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대다수가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안도 꽤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법안 발의가 쇄도하고 있고 건설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규제 강화와 신설이 주를 이루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입법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수술실의 무영등(無影燈)과 같이 법을 통해 모든 산업의 규율을 담을 수는 없다. 지속적 건설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로 점철된 ‘대책의 양산’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new normal)에 걸맞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 정책의 틀’의 변화와 이를 뒷받침할 지속되고 일관된 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가 이를 명심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표 1 국토교통부 등록 규제 현황

(단위: 조문 기준 규제 수, 2019.9.14. 기준)

구 분	규제 법률 수	규제 조문 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국토부 규제 법률(A)	101	1,895	1,105	1,143	2,664
직접적 건설규제(B)	21	342	324	231	913
비율(B/A)	20.8%	18.0%	29.3%	20.2%	34.3%

출처 : 전영준(2019),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조문 수 기준

(동일 조문 내 복수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1개 규제로 계산)

참고문헌

1.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020
2. 임재주 외, 국회의 이해, 한울출판사, 2019
3. 전영준, 규제개혁과 산업구조 혁신, 차기정부 건설·주택분야 정책 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
4. 전영준,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
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30 건설산업의 미래, 2020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2020
7. 한상준, 스페셜 리포트, 건설 규제개혁 체감도 ‘제로’, ‘땅파먹기’식 유인 규제 혁파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